



보 도 자 료



보도일시	배포 즉시 보도		총 2쪽(붙임 별도)
배포일시	2019. 6. 18.(화)	담당부서	법무부 상사법무과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
주책임자	상사법무과장 명한석 02) 2110-3167 자본시장과장 안창국 02) 2100-2657	담당자	상사법무과 서기관 이규철(02-2110-3256) 자본시장과 사무관 나혜영(02-2100-2652)
사진	사진있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진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	대변인실	법무부 02) 2110-3717 금융위원회 02) 2100-2550

추석 연휴 후 증권제도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.

- '19. 6. 18.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」 국무회의 통과 -

☐ '19. 6. 18.(화),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.

○ '16. 3. 22. 전자증권제도의 근거법률인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전자증권법”)이 제정되었고, 시행령은 전자증권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.

○ 추석연휴 직후인 9. 16.부터 상장주식·사채 등 주요 증권의 발행·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게 될 예정입니다.

☐ 전자증권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※ 붙임 설명자료 및 '19. 1. 28.일자 보도자료 참조

① (개요) 전자증권제도는 주식·사채 등을 전자등록으로 등록하여 증권의 발행·유통 및 권리행사가 전면 실물 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

· 전자등록을 하여야 증권에 관한 권리 취득·이전이 가능하며(효력요건), 신탁재산표시·말소의 경우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을 갖게 됩니다(대항요건).

· 전자등록계좌부에 등록된 경우 적법하게 증권상의 권리를 갖는 것으로 추정되고(권리추정력), 선의취득이 가능합니다.

- ② (**적용대상**) 주식·사채 등 대부분의 증권에 적용되며(법 제2조 제1호),
- 상장주식·사채 등 상장증권은 전자등록방식으로만 발행이 가능하고, 전자등록 후에는 실물발행이 금지 됩니다(법 제36조 제1항·제2항).
 - ※ 위반하여 실물이 발행되더라도 효력이 인정되지 않음
 - 비상장주식과 같은 의무화 대상 외의 증권은 발행인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전자등록이 됩니다(신청하지 않을 경우 현행 실물의 효력은 계속 유지).
- ③ (**권리행사 방법**) 권리자는 주주명부 기재 외에 전자등록기관의 “소유자 증명서”·“소유내용의 통지”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- ④ (**운영기관**) 법무부장관 및 금융위원회가 공동으로 허가하는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(금융회사 등)이 운영합니다. 권리자는 원칙적으로 계좌관리기관을 통해 권리변동 내역을 전자등록 할 수 있습니다.
- ※ 한국예탁결제원이 전자등록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(법 부칙 제8조 제1항)
- ⑤ (**시행 당시 전환절차**) 상장주식 등 의무적용대상 증권은 발행인의 신청 및 정관변경이 없더라도 일괄 전환됩니다(법 부칙 제3조 제1항).
- 일괄전환되는 상장주식 중 예탁되지 않은 실물은 실효될 예정이며, 실물에 대한 권리자는 시행일 직전 영업일(9. 11.)까지 발행인에게 전자등록할 계좌를 통지하고 실물 증권을 제출해야 합니다(법 부칙 제3조 제3항).
 - ※ 미예탁 실물권리자가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권리자 명의로 특별계좌를 개설하여 증권을 제출하거나 권리가 증명할 때까지 이전을 제한
 - 한편, 시행 당시 전자증권법에 따라 일괄전환되는 증권을 발행한 발행인이 새로이 전자등록 대상 증권을 발행하는 경우, 정관등이 개정될 때까지는 정관등의 개정안을 제출하여 전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(시행령안 부칙 제6조).

□ 시행령안은 향후 공포 절차를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.

□ 법무부와 금융위원회는 하위규정을 마련하는 등 전자증권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.

- 【붙임】 1. 전자증권제도 및 법령 주요내용
2. Q&A
3. 시행령안 ▣